



주간통일정세 2010-43(2010.10.18~10.2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4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김정은, 中대표단과 외교무대서 침묵(10/18, 요미우리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에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저우융캉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의 지난 9일 면담에서 인사만 했을 뿐 발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
 -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김 국방위원장과 함께 저우융캉 상무위원을 만났으나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악수만 했으며 김 국방위원장의 말을 열심히 듣기만 했다고 전함.
 - 신문은 저우융캉과의 면담은 김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에게 첫 외교무대가 되었지만 자유로운 발언은 용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北김정일, 中가극 관람 후 “북·중친선 불변” 강조(10/1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전통가극 ‘량산백과 축영대’를 피바다 가극단이 개작한 공연을 관람하고 “중국 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 60돌이 되는 때 중국 동지들의 협조를 받아 또 한 편의 가극을 완성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며 “조·중 친선을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고 밝혔다
 - 김 위원장은 또 “문화교류는 나라들 사이의 호상 이해를 두터이하고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피바다 가극단을 비롯한 예술단체들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공연해야 할 것”이라고 전함.
 - 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최태복·홍석형(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 겸직), 강석주(내각 부총리 겸직)와,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직),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당 비서 겸직)가 수행

- **北, 평양에 김정은 전시관 설치…우상화 본격화(10/19, 열린북한방송)**
 - 방송은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우상화 자료가 전시된 ‘김정은관(館)’이 평양 조선혁명박물관 내에 설치돼 이미 당 간부 등에게 공개됐다고 전함.
 - 방송은 북한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관’ 정면에는 ‘김정은 대



장'이라는 타이틀 아래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사진이 걸려 있다"면서 "지난 7월 초부터 당과 군의 고위 간부들이 일부 관람했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내년 초 김정은 생일(1월8일)을 기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또 "“김정은관”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의 위상이 1980년 6차 당대회 직후 후계자로 공표됐을 때의 김정일과 비슷한 수준임을 의미한다"면서 "조선혁명박물관 안에 ‘김정일관’이 만들어진 것도 6차 당대회 이듬해인 1981년의 김정일 생일(2월16일) 때"라고 설명

● 후진타오, 北에 쌀 50만t 지원 약속(10/22, 도쿄신문)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북한에 쌀 50만t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
- 신문은 중국과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8월 27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경제제재로 식량사정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 1월까지 쌀 50만t 이상을 지원받고 싶다고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중국 측은 50만t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함.
- 이어 쌀 50만t은 중국 통화로 약 22억 위안 상당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북한 지원은 그동안 금액 기준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지원액이 명확하지않다고 보도
- 또 당시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 측은 '북한 노동당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함.

● 北양형섭, 김정은 후계 재차 확인(10/23, 신화통신)

-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 밝혔던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이 이번에는 더욱 직설적인 표현으로 김정은의 위상을 재차 확인
- 통신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중국부녀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쑹시우옌(宋秀岩) 당 중앙위원 겸 전국부녀연합 부주석을 만나 "최근 열린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 동지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조선 혁명 발전에서 매우 깊은 의의를 갖는다"고 밝힘.
- 이어 양 부위원장은 "김정일 동지가 김일성 주석이 창건하신 조선노동당을 계승했듯이 앞으로는 조선노동당의 혁명 사업을 김정은 동지가 계승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인민들에게 매우 깊은 믿음과 격려가 되고 있어 조선의 혁명 사업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



● **귀보승 中당중앙군사위 부주석 방북(10/23, 조선중앙통신; 신화통신)**

- 통신은 귀보승(郭伯雄)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고위군사대표단이 23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함.
- 공항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류홍차이(劉洪才) 북한주재 중국대사 등이 대표단을 영접, 대표단은 대표단은 마샤오텐(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통스핑(童世平) 총정치부 부주임, 리안동 총장비부 부부장, 진은하 총후근부 부부장, 왕홍요 심양군구 부정치위원, 풍조거 제남군구 부사령원, 조육민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부주임, 전리화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 주도 총정치부 선전부 부장 등으로 구성
-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진행된 환영의식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군 총참모장과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재경 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리 부위원장과 귀 부주석이 북한군 명예위병대를 사열
- 신화통신은 이날 대표단의 방북 소식을 전하며 “북·중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역내 평화를 지키는 데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보도

● **北·中, ‘軍친선협조 발전’(10/24,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리영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참모장은 23일 중국 군사대표단을 위한 국방위원회 주최 연회 연설을 통해 “(대표단의 방문은)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그는 “미제 침략자를 반대해 항전을 벌이는 과정에 피로 맺어진 조·중 친선의 유대가 더욱 강화됐다”며 “(북·중간) 공동의 노력에 의해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힘.
- 중국 귀보승(郭伯雄)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발전되어온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새 세기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친선협조관계 발전의 전망을 확신하게 된다”고 화답함.
- 이 자리에는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정명도 해군사령관, 리병철 공군사령관 김명환 상장,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이 배석
- 중국 군사대표단은 귀 부주석을 단장으로 마샤오텐(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통스핑(童世平) 총정치부 부주임, 리안동 총장비부 부부장, 진은하 총후근부 부부장, 왕홍요 심양군구 부정치위원, 풍조거 제남군구 부사령원, 조육민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부주임, 전리화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 주도 총정치부 선전부 부장 등으로 구성



● 北·中, 수뇌부 ‘아리랑’ 관람(10/24, 조선중앙방송)

- 중국인민해방군의 6.25전쟁 참전 60주년을 맞아 귀보송(郭伯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비롯한 중국인민군 관계자들이 대거 방북한 가운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해 함께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하며 친선을 다짐.
-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5월 1일 경기장에서 열린 ‘아리랑’ 공연에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짐.
- 북측에서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최영림,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인 김영춘·김기남·최태복·양형섭·주상성,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양건·김영일·최룡해·리태남·김정각이 참석
- 중국측에서는 귀보송(郭伯雄)을 비롯해 마샤오텐(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퉁스핑(童世平) 총정치부 부주임, 리안동 총장비부 부부장, 진은하 총후근부 부부장, 왕홍요 심양군구 부정지위위원, 풍조거 제남군구 부사령원, 조육민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부주임, 전리화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 주도 총정치부 선전부 부장이 참석
- 방송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세대를 이어 공고히 발전시켜나가려는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친선아리랑장(章)은 공연을 더욱 뜻깊게 장식했다”고 전함.
- 안동춘 문화상은 이날 연설에서 “조·중(북·중)친선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피로써 맺어지고 역사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공동의 재부(재산)이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패의 친선”이라고 강조
- 방송은 이어 방송은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주년을 맞아 만든 이 영화는 항미월조 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조선전선에서 용약(용기있게) 떨쳐나와 상감령 전투에서 무비의(뛰어난) 용감성을 발휘한 황개강 영웅을 비롯한 중국 인민지원군 용사들의 빛나는 위훈을 감명깊게 보여준다”고 설명

● 中…軍대표단, 인민지원군 열사묘 참배(10/24, 반관영통신)

- 통신은 중국군 대표단이 북한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인민지원군 열사묘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의 6.25 참전 60주년을 맞아 방북 중인 중국군 고위급 대표단은 이날 열사묘에서 참배하면서 북·중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의 강화를 다짐한 것으로 보임.
- 중국군 대표단의 참배에는 북측에서 최창식 보건상, 이영철 당 국제연락부 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성기 외무성 부상 등이 동참



■ 김정일동향

- 10/19 김정일, 창작 완성된 가극 ‘양산백과 축영대’ 관람(10/19, 중통·중방)
 - 김기남·최태복·홍석형(정치국 위원/당비서), 김경희(당부장), 강석주(내각부총리),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정치국 후보위원/당비서) 등
- 10/20 김정일, 동대원은하피복공장 3직장 등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10/20,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인민보안부 대표단(단장: 허영호 부부장)과 베트남 공안성 대표단간 회담,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0/19, 중통)
- 선군정치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자주통일·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평화수호의 정치”라며 그 정당성 강조(10/20, 중통)
- 김기남(黨비서), 중국 인민일보대표단(단장: 마리 부총편집)과 담화(10/20, 중통)

대표단 단장은 두 나라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의지 표명
- 김정일 노작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20돌과 ‘일생산 및 재정총화방침’ 제시 40돌 기념 중앙보고회, 최영림(내각총리), 홍석형(黨비서), 박수길(내각부총리 겸 재정상/기념보고)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0/21, 중통)
- 訪北 中 인민지원군 노병대표단, 대성산혁명열사릉에 헌화(10/21, 중통)

나. 경제

● 中훈춘-北 원정리 잇는 신두만강대교 추진(10/18, 연합뉴스)

- 통신은 북한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획득, 동해 항로를 확보한 중국 훈춘(琿春)시가 북한 원정리와 연결되는 두만강대교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
-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와 훈춘시에 따르면 훈춘시는 노후한 훈춘-원정리 간 기존 두만강대교를 대체할 신두만강대교 건설을 추진, 최근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함.
- 연변주와 훈춘시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신설 교량 건설 사업 승인과 사업비 지원을 요청
- 두만강대교 상류 50m 지점에 세워질 새 다리는 두만강대교보다 42m가 늘어난 577m 길이에 왕복 4차로(폭 25m)로 건설할 계획이며



완공되면 연간 120만톤의 물류를 통관할 수 있게 된다고 예상

- 연변주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 창춘(長春)에서 열린 동북아무역 박람회에서 북한과 신두만강대교 신설에 합의했으며 북한도 적극적”이라며 “이미 설계가 완공됐으나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신두만강대교의 착공 시기는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고 말함.

● 中접경지역, 북한 근로자 대거 유입(10/18, 아사히신문)

- 신문은 북한과 가까운 중국의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투먼 등지에 북한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린성의 조선족자치주 투먼시는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 근로자 100명을 이달 중 받아들일 방침이며, 단둥시도 약 1천명의 북한 근로자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함.
-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북한과 가까운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국경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새 고임금을 찾아 한국과 일본, 중국의 연안 도시 등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함.
-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건비가 급등하자 이 지역의 기업체들은 저렴한 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음. 경제가 어려운 북한으로서는 외화획득의 호기가 되고 있음.
- 투먼시의 경우 인구 13만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대북 무역의 거점 중 하나에 해당함. 북한 근로자들은 주로 대북 무역 관련 기업이 밀집한 ‘북한공업단지’에 있는 플라스틱공장 등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보임.

● 中BYD, 北서 인기…올해 500대 판매(10/19, 신화통신)

- 통신은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 비야디(比亞迪, BYD)가 북한에서 올해 500대 이상의 승용차를 판매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
- 통신은 BYD가 북한에서 환영받는 몇 안 되는 외국산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면서 올해 500대 이상의 승용차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평양에 애프터서비스센터를 개설, 차량 무료 수리와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
- 이어 BYD가 지난 18일 북한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한 제6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진베이(金杯)승용차와 가전업체 하이얼(海爾) 등 중국의 유명 업체들과 함께 참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임.
- 통신은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평양 국제상품박람회에 중국과 러시아, 독일, 스위스 등 19개국 140여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이 64개에 이른다고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제6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10/18~21)' 개막식, 리태남(내각 부총리), 리용남(무역상), 김문정(조선국제전람회 사장/개막연설) 등 참가下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10/18, 중통)
- 예성강6호발전소·연산군민발전소 완공 및 연하발전소 등 1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들 완공 임박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중소형발전소 건설 자랑(10/18, 중통)
-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 인회토를 이용한 효능높은 '유기질 광물비료' 개발로 농업생산에서 성과 이룩(10/20, 중통)

다. 군사

● 北·中, 중공군 6.25참전 60주년 띄우기(10/20, 해방군보; 신화망; 노동신문)

-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20일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중공군 노병들이 인민해방군 문예대표단과 함께 방북해 북·중 우의를 다졌다고 보도
- 이들은 중공군의 참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북했으며 북한의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연회를 베풀었다고 해방군보는 전함.
- 신화통신의 인터넷사이트인 신화망은 이날 '중국과 조선(북한)의 피로 맺은 우의가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제목으로 북·중 우의를 강조하는 노동신문의 기사를 게재
- 신화망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조·중 양국민의 민족과 혈맥은 다르지만, 선대가 피로 맺은 우의가 이후 세대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더 아름답게 번창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에 국경은 그어져 있으나 양국 우의에는 한계가 없다"고 전함.
- 신화망은 위 노동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오는 25일이 중국 인민지원군의 6.25 전쟁 참전 60주년"이라고 강조

■ 기타 (대내 군사)

- 中 인민지원군의 '한국戰' 참전(66만1,736명) 60돌 관련 "戰勢회복, 원조물자 제공과 전후복구 지원" 등 경의표명 및 "피로써 다져진 조·중친선은 시대와 세대를 이어 끝없이 강화 발전될 것"이라고 역설 (10/21, 중통)



라. 사회·문화

● 北 혜산시 고교생들, 중국서 폭약 밀반입(10/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량강도 혜산시의 고등중학생(중고교 통합 학제) 3명이 당창건 기념일 다음날인 이달 11일 중국에서 폭약 10kg을 밀반입하다 체포됐다고 전함.
- 방송은 혜산시 소식통들을 인용, “혜산시 송봉고등중학교에 다니는 강모군 등 학생 3명이 중국에서 폭약을 들여오다 붙잡혀 보안당국에 비상이 걸리고 국경도 일시 봉쇄됐다”면서 “왕덕역(김정일 전용역)으로 통하는 철교를 폭파하기 위해 폭약을 밀반입했다는 소문 등이 나돌고 있으나 정확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힘.
- 강군 등은 알고 지내던 국경경비대원들과 짜고 각각 5kg의 폭약이 든 가방 2개를 갖고 들어오다 마을 어귀에서 노동자 규찰대에 적발돼 도 보위부로 끌려갔으나 현재까지 소식이 없다고 전함.
- 셋 다 만15세의 노동자 집안 출신인 이들은 평소 책읽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들이었는데, 당 창건 65주년(10월10일) 직후의 특별경계기간에 국경경비대까지 끼고 폭약을 밀반입해 당국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설명
- 사건 직후 량강도 당국은 고 김일성 주석의 동상이 있는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과 왕덕역 등 도내 주요 건물 경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짐.

● 남한 드라마, 하루면 북한에 간다(10/20,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최근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져 방영 다음날이면 북한 ‘장마당’(시장)에서 녹화 DVD를 살 수 있다고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일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지난 18일 미국 뉴욕대학 내 아서 카터 저널리즘 연구소(Arthur L. Carter Journalism Institute)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위성을 통해 방송되는 KBS, MBC 드라마가 북·중 국경과 가까운 연변 등에서 DVD로 만들어져 북한 쪽에 팔린다”면서 “밤에 방송된 드라마가 빠르면 그 이튿날 북한 내에서 유통되는 상황”이라고 밝힘.
- 지로 대표는 또 “VCR테이프는 부피가 크고, 복사도 번거로워 요즘엔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북한과 싱가포르 회사가 합작해 만든 ‘하나DVD’라는 재생기가 새로 나왔는데, 이 재생기로도 남한드라마를 볼 수 있다”고 덧붙임.
-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파 속도도 빨라져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함.
- 방송도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 “요즘 북한에선 성인용 음란물이 급속히 퍼져 집집마다 1~2장씩 갖고 있을 정도”라면서 “미성년자와 대학생들도 이런 음란물을 많이 접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함.



- **北당창건일 때 김일성 사후 최대규모 ‘명절공급’(10/22,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일 때 북한 주민들에게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최대 규모의 ‘명절공급’이 이뤄졌다고 전함.
 - 방송은 ‘량강도 대홍단군의 간부’ 말을 인용, “10월10일을 맞아 주민들에게 이틀분 식량과 여러가지 생필품이 국정가격으로 공급됐다”면서 “비록 양은 적었지만 수령님(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이렇게 많이 공급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함.
 -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대표적 감자 산지인 대홍단군의 경우 군내 9천500여 세대별로 술 2병, 감자당면 1kg, 감자 물엿 1kg, 식초 1병, 콩기름 1병, 돼지고기 1kg, 세숫비누 1장, 신발 1켤레, 칫솔·치약이 공급됐다고 보도
 - 북한의 ‘명절공급’이란 김일성·김정일 부자 생일 등 국가 기념일에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국정가격으로 각종 생필품을 파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이번에 장마당에서 500원 정도인 옥수수 술 1병이 국정가격 5월에, 1천200원 정도인 콩기름 500g이 국정가격 8월에 공급됐다고 소식통은 설명
 - 방송은 “대홍단의 기초식품공장과 전분공장에 감자술과 감자물엿을 더 많이 빼돌리려는 간부들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면서 “갑자기 술이 많이 풀리면서 음주로 인한 사고도 많았는데 대홍단군에서도 주민과 감자를 실은 트랙터가 음주운전으로 전복돼 4명이 숨졌다”고 전함.

- **중국 방문 北주민 50%는 ‘취업목적’(10/22, 미국의 소리(VOA))**
 - 방송은 지난해 중국을 공식 방문한 북한 주민 10만여명 중 절반은 ‘취업 목적’이었다고 전함.
 - 방송은 중국의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여유국의 ‘2009년 중국 여유통계 공보’를 인용, “2009년 한해 동안 중국에 공식 입국한 북한 주민은 10만3천900명으로 지난해 10만1천824명보다 2.02% 증가했다”면서 “입국 목적별로는 5만2천100명(50.1%)이 취업, 1만9천400명(18.6%)이 회의나 사업, 4천100명(3.9%)이 관광이었고 나머지는 친지 방문(3백명), 기타 목적(2만8천명)이었다”고 밝힘.
 - 성별로는 남성이 9만1천800명으로 여성(1만2천100명)을 압도했고, 연령대별로는 45~64세가 4만8천600명, 25~44세가 4만6천500명 임. 입국시 교통수단은 선박(3만5천800명), 비행기(2만7천800명), 기차(2만1천900명), 자동차(1만4천600명), 도보(3천800명) 순이었음.

- **‘남북합작’ 평양과기대 25일 정식 개교(10/22, 연합뉴스)**
 - 남북 첫 합작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오는 25일 정식 개교, 모든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임.
 - 평양과기대 총장을 맡은 김진경 연변과기대 총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설비가 완비됐고 교수진도 모두 갖춰졌다”며



- “25일 정식 개교한다”고 밝힘.
- 그는 “개교에 맞춰 평양과기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17명의 외국 교수가 23일 선양(瀋陽)에서 고려항공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간다”며 “이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온 외국인 교수들”이라고 전함.
 - 연변과기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6월 40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을 선발, 4명의 외국 교수가 이미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숙사와 구내식당 설비 등의 문제로 그동안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에 대한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설비가 완비되고 교수진도 확보돼 25일부터 대학원과 학부 수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
 - 이 관계자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전공 관련 영어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전공과목 수업은 내년 신학기부터 시작된다”며 “내년 신학기부터는 한국 교수들도 수업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평양과기대는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 교육성이 설립에 합의, 지난 2002년 착공식을 하고 2003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7년 만인 지난해 9월 완공했으나 컴퓨터 등 과학 기자재 반입과 남한 교수들의 장기 체류를 놓고 남북한이 이견을 보여 개교에 차질을 빚은 바 있음.
- **北시장 쌀가격, 추수철 맞아 대폭 하락(10/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이 추수철을 맞아 평양의 장마당(시장)에서 쌀가격이 kg당 북한 돈 1천원에서 700~800원 정도로 떨어졌다고 보도
 - 중국을 방문한 평양주민 조모(여)씨는 “햅쌀이 나올 때쯤 상인들이 비축해 뒀던 쌀을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늘 일시적으로 쌀값이 하락한다”며 이같이 전함.
 - 조씨는 “이 쌀은 완전히 도정한 중국 쌀과도 차이가 나는, 품질이 낮은 알곡”이라며 “쌀값 하락 현상은 오래 가지는 못하고 12월 즈음 이 되면 다시 오르는데 돈이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쌀값이 떨어져도 이로울 게 없다”고 말함.
 - RFA는 북한에서 살다 나온 화교들의 말을 빌려 “외부에서 지원된 쌀이 빼돌려졌다가 시장에 흘러나오거나 새로 수확된 쌀이 불법적으로 새나가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되면서 시장의 쌀 수요가 적어져 쌀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선집’ 제6권 증보판 출판(10/20, 중통)
- ‘은하수 10월 음악회’,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 중(10/20, 중방)
- ‘중국 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60돌 기념 사진전시회(10.21~26) 개막식, 대외문화교류센터에서 최창식(보건상/연설) 등 참가자 진행



(10/21, 중방)

- 중국영화상영주간, 홍광순(국가영화위원장), 류홍재(駐北 中 대사) 등 참가下 대동문영화관에서 진행(10/21, 중통)
-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 첫 공연,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10/21,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中저우융캉, 北 노동당 친선대표단 만나(10/1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경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단장으로 한 노동당 친선대표단을 만났다고 보도
 - 이 자리에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류제이(劉結一)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최병관 중국주재 북한대사가 배석했다고 전함.
 - 저우융캉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이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한 것은 “두 당, 두 나라 친선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준다”면서 “김정일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
- **日정부 “일본행 탈북자 현재 100명 이상”(10/20, 교도통신)**
 -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부(副)대신은 20일 현재까지 일본에 입국한 탈북자가 100명 이상이라고 밝힘.
 - 마쓰모토 부대신은 이날 참의원(상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에서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일본에 입국한 탈북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100명을 넘는다”고 말했다고 보도
 - 이들 대다수는 1960~70년대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 동포나 일본인 처, 가족들이므로 알려짐. 마쓰모토 부대신은 상세한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통신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등의 진술을 인용, 일본행 탈북자가 약 18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함.
 - 아리타 의원은 지금도 중국 내 일본 공관에 탈북자 10여명이 머물고 있고, 길게는 2년 가까이 중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요청. 이에 대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은 “보호 중인 탈북자의 조기 출국은 관계국(중국)의 의향을 고려해 가며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 **北문경덕 일행, 中 상하이·베이징 참관(10/21,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중국을 방문 중인 평양시당 책임비서 문경덕(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친선 대표단이 상하이(上海)와 베이징(北京)시의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보도
 - 지난 16일 중국을 방문한 이 대표단에는 평양과 함께 남포(특급시), 라선(특별시)에 9개 도까지 12개 시·도의 당 책임비서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전함.
 - 방송은 “대표단은 2010년 상해 세계박람회 조선관과 중국관을 돌아봤으며 중국공산당 제1차 대회장 기념관, 상해 도시건설계획전시관, 동방명주(東方明珠) 텔레비전탑을 참관했다”고 전함.
 - 또 이들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주경기장과 베이징 도시계획전시관, 중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인 국가대극원, 철도부와 교통운수부 도로과학연구원, 베이징시 원림녹화국 등을 돌아봤다고 방송은 밝힘.
 - 방송은 이와 함께 대표단은 중국측 인사로 류치(劉淇) 베이징시 당서기,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났으며 대외연락부와 상하이·베이징시 당에서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 **北, ‘유엔 北인권 논의는 정치적 음모’(10/23, 로이터통신)**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는 22일 북한에 대한 비난은 북한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라며 북한 인권 관련 유엔 보고서를 공격
 - 이 보고서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것으로, 유엔총회의 인권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다루스만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식량, 물, 위생, 보건의 향유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도록 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박 차석대사는 다루스만의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유엔총회의 연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스템을 고립시키고 질식시키기 위해 적대 세력들에 의해 조장되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
 - 그는 “목적은 명백하다”라며 “인권 신장과 보호는 말 뿐이고 실제로 그들이 하려는 것은 우리 나라의 이데올로기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언급
 - 박 차석대사는 19쪽에 달하는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한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열망과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춰 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해 우리의 사회주의적 시스템을 충분히 공고히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

- **北시·도 책임비서, 中동북3성 방문 후 귀국(10/23, 연합뉴스)**

 - 통신은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단체 방문했던 북한의 시·도당 책임비서 12명이 7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환했다고 보도



- 통신은 대표단이 20일부터 사흘간 지린(吉林)성의 지린시와 창춘(長春)시,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시의 식품가공 및 궤도교통, 화학공업, 기계제조 기업과 농업기지를 돌아봤다고 전함.
- 또한 대표단이 헤이룽장성 지빙쉬안(吉炳軒) 서기와 지린성 쑨정차이(孫政才) 서기를 만나고 각 성의 당과 창춘시·지린시 당이 마련한 연회에도 초대됐다고 덧붙였다.

● 북, 주중 대사 6개월만에 전격 교체(10/24,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4월 부임한 최병관(崔炳寬) 주중 대사를 6개월만에 전격 교체
-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최병관 대사는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과 일부 주중 외교 사절들에게 이임인사를 하고 지난 23일 평양으로 떠났다고 함.
- 최대사의 후임으로 발령받은 지재룡(池在龍, 68) 당 국제부 부부장은 25일 평양에서 중국군의 6.25 참전 6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베이징에 정식 부임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함.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지재룡 신임 대사는 이미 중국 외교부로부터 아그레망(임명허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박의춘 외무상, 주북 스웨덴 대사 '바르브르 엘름'과 담화(10/18, 중통)
- 최근 일본에서 '간도대지진 조선인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회의 결성은 "日정부가 과거청산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속 촉구(10/18, 중통·노동신문)
- 당중앙위, 中 '습근평'(習近平)의 당중앙군사위 부주석 피선(중국 공산당 제17기 제5차 전원회의) 관련 "대를 이어 조·중친선 공고발전 기대" 등 요지의 축전 발송(10/19, 중통)
- 오극렬(국방총 부위원장)·박재경(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참석下 中 인민지원군 老兵 대표단 위한 연회 개최(10/19, 중통)
- 中 '주영강'(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 서기), 방중 北 당친선 대표단(단장: 문경덕 당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 접견(10/19, 중통)
- 北, 중국공산당 중앙위 제17기 제5차 전원회의(10/15~18, 베이징) 진행 소식 상세보도(10/19, 중통)
- 최근 미국의 예멘에 대한 군사원조 등 관계강화 움직임은 "예멘을 장악하고 '아덴만'을 저들의 통제권 안에 넣으려는 것"이라고 주장(10/19, 중방·노동신문)
- 오극렬(국방위 부위원장)·박재경(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참석下 中 인민지원군 노병 대표단 위한 연회 개최(10/19, 중통)



- 박의춘(외무상), 주북 세계식량계획(WFP)대표(클라우디아 폰 로엘) 신임장 접수 및 담화(10/20,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통신, ‘핵 보유 정당’ 주장(10/2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우리의 핵억제력 보유는 천만번 정당하다’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은 핵무기를 가진 교전일방이 비핵국가인 교전일방에 대해 핵위협을 끊임 없이 가한 데 있으며 그 장본인은 미국”이라며 “우리 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해 핵억제력을 보유했다”고 주장
- 또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핵위협에 핵억제력 보유로 단호히 맞섰기에 조선반도에서 핵불균형 상태가 끝장나고 전쟁 발발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게 됐다”면서 “핵억제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보검이고 핵억제력 보유는 천만번 옳은 선택”이라고 말함.
- 이어 “미국이 1950년대부터 현 오바마 행정부까지 반세기 이상에 걸쳐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계획해온 사실이 최근 비밀해제된 미 행정부 문서들에 의해 확인됐다”며 “미국은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

3. 대남정세

● 北신문, 금강산 실무회담 조속 개최 재촉구(10/18, 노동신문)

- 신문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면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의 조속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고 보도
- 신문은 이날 개인필명 논평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15일 갖자는 북측 제안에 대해 남측이 ‘추후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것을 “북남관계 개선을 외면하는 매우 불손한 태도”라고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관계개선을 바라한다면 무엇보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나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
- 한편, 신문은 이날 ‘화해와 협력은 겨레의 지향, 시대의 요구’라는 제목의 별도 논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협력은 조국 통일의 필수적 전제이고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면서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지 못할 그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다”고 주장



- **남북적십자, 이산가족 생사확인 결과 교환(10/18, 연합뉴스)**
 - 통신은 남북 적십자사가 18일 오전 개성공업지구 내 북측 통행검사소에서 이산가족 상봉후보자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결과를 교환했다고 보도
 - 대한적십자사(한적)는 북측의 상봉 후보자 200명 중 162명의 가족(총 1천304명)이 현재 생존해 있음을 확인해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결과를 전달했다고 이날 밝힘.
 - 또 북측은 남측의 상봉 후보자 200명 중 140명의 가족(총 780명)이 북한에 살아있다고 알려왔음.
 - 한적은 북한의 조선적십자회에서 받은 생사확인 결과를 상봉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상봉 후보자의 나이, 북측 가족의 직계 여부 등을 따져 최종 상봉대상자 100명을 선정한 뒤 오는 20일 북측과 명단을 교환할 예정
 - 상봉 장소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로 정해졌는데, 북측 방문단의 남측 가족 상봉이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흘간 먼저 이뤄지고 하루를 쉬 뒤 내달 3~5일 남측 방문단이 북측 가족을 만난다고 함.

- **‘황장엽 암살’ 남파간첩 또 적발…1명 구속(10/19, 연합뉴스)**
 - 최근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이 또 적발돼 구속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해 국내에서 황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이모(46)씨를 19일 구속
 - 검찰과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황장엽을 살해하라”는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령을 받고 중국에서 국내 입국을 준비한 다음 태국을 경유해 지난 8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음.
 - 이씨는 1998년부터 5년여 간 간첩 교육을 받은 뒤 2004년부터 5년여 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내 잠입을 준비했으며,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노동당 중앙당 부부장급 또는 북한군 대좌(대령)급 이상의 특별 대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짐.
 - 이씨는 공안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을 때 탈북 동기 등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조사를 받은 끝에 신분과 침투 목적이 탄로난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지난해 초 노동당 소속의 ‘작전부’와 ‘35호실’, 북한군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맡는 정찰총국을 출범시킴.
 - 지난해에 검거한 김씨 등은 군 정찰국 출신인 반면 이씨는 노동당 35호실 출신인 것으로 전해짐.



● 北, 적십자회담 대표단 명단 통보해와(10/22, 연합뉴스)

- 북측이 오는 26~27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리는 남북 적십자회담에 참가할 3명의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왔다고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밝혔다.
- 북측 대표단은 최성익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부위원장(단장)을 비롯해 적십자회중앙위 박용일 중앙위원, 조정철 부부장 등 3명이며 이날 오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명단을 통보
- 우리 측은 전날 김용현 대한적십자사(한적)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김의도 한적 남북교류실행위원(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김성근 한적 남북교류팀장 등 3명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

■ 기타 (대남)

- ‘한·미연합공군훈련’ 진행과 관련 “우리(北)에 대한 엄중한 도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등으로 지속 비난과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 주장(10/19, 중통·평방)
- ‘PSI훈련’(10/13~14)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훈련이 초래할 것이란 “군사적 충돌과 남북관계 악화뿐”이라고 위협(10/19, 중통)
- 대북 급변사태 대비 ‘개념계획-5029’를 ‘작전계획단계’로 격상 및 완성 계획에 대해 “실현될 수 없는 흡수통일 개꿈”이라고 지속 비난(10/19, 평방)
- 한나라당의 보안법 개정안(이적단체 해산 자유화) 국회제출 관련 “파쇼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동족대결책동”으로 비난하며 보안법 폐지 투쟁 선동(10/20, 평방)
- 南 PSI 훈련의 日 해상자위대 참가 관련 “反北 압살과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백년숙적에게 재침의 뱃길을 서슴없이 열어주는 망동”이라고 지속 비난(10/20, 중방)
- 南 여수 군인폭동사건(1948/10/20) 62돌 즈음 同 사건을 “미국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애국적 장거”로 평가하며 “駐韓美軍 철수와 反정부 투쟁” 선동(10/20, 중방)
- 남측은 “외세와 야합하여 핵전쟁연습 소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韓美연합공군훈련’ 진행 및 금년 현재 실시된 ‘PSI훈련’과 ‘연합대잠수함훈련’ 등 韓美 군사훈련 지속 비난(10/21, 평방)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통신 “핵 보유 정당” 주장(10/23)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논평을 통해 자국의 핵무기 보유가 정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우리의 핵억제력 보유는 천만번 정당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은 핵무기를 가진 교전일방이 비핵국가인 교전일방에 대해 핵위협을 끊임 없이 가한 데 있으며 그 장본인은 미국”이라며 “우리 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해 핵억제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통신은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핵위협에 핵억제력 보유로 단호히 맞섰기에 조선반도에서 핵불균형 상태가 끝장나고 전쟁 발발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게 됐다”면서 “핵억제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보검이고 핵억제력 보유는 천만번 옳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 중앙통신은 “미국이 1950년대부터 현 오바마 행정부까지 반세기 이상에 걸쳐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계획해온 사실이 최근 비밀해제된 미 행정부 문서들에 의해 확인됐다”며 “미국은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美 前정보국장 “北 핵무기 8~10개 보유”(10/22)

- 미국의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이 현재 8~1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지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5월까지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을 지낸 데니스 블레어 씨가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과 관련, “모두 핵무기로 전용됐다는 견해가 자연스럽다”면서 “핵무기 8~1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블레어 전 국장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기술 등 운반수단의 능력에는 불명료한 부분이 있지만 핵폭탄을 어선에 적재해 미국의 항구에 돌진할 수도 있다”면서 “한중일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도 북한 핵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북한에 대해 경제, 상업 분야에서 강한 우위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일본이 정보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장래 한반도가 통일된뒤 북한의 핵무기를 한국이 계승할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결국이어서 북한의 핵이 투명한 형태로 몰수되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의 보유 핵무기 수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4월 켄터키주 루이빌대학에서 핵 비확산을 주제로 연설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또 통일연구원 전성훈 박사는 올해초 발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북한이 작년말 현재 보유한 플루토늄 양을 기준으로 5~23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9월18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북한은 현재 플루토늄을 40여kg 추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재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데 6~7kg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6~8개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추정했었음.

● 中신문 “北핵실험은 현 분위기와 안 맞아”(10/22)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 이후 북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긴밀해진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이 반대하는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추측은 비논리적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주장했다.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2일 1면 전체를 할애해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국 언론 보도를 반박했음. 환구시보 북한 특파원은 평양에서는 3차 핵실험에 관련한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65주년 기념일인 25일이 다가오면서 중국 방문단이 물밑 듯 밀려드는 등 북중 우호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환구시보는 올해부터 ‘밭은 조국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노동당의 선전 구호가 등장하는 등 북한은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라선특별시에 진출한 중국 기업인도 예전보다 개방도가 높아졌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의 북한 전문가 뤼차오(呂超) 주임은 “북한은 후계 승계 이후 우선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고 중국과 북한의 우호 관계도 회복이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는 핵실험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고 더더욱 중국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음.
- 뤼 주임은 “만약 북한이 이 시기에 핵실험을 한다면 긴밀해진 북중 관계는 겨울철에 폭우를 만난 것처럼 얼어붙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김외교 “불능화는 6자재개 최소한 조치”(10/21)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가 전날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중유 75만t 만큼 불능화를 이행해야 6자회담 재개에 응할 수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최소한의 조치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 출석, 민주당 송민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최소한 국제사회로부터 받아간 75만t 만큼의 불능화는 이행해야 비핵화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먼저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구두약속만 갖고는 안되며 6자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 그는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재개와의 연관성에 대해 “두 사안이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다”라며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사과하지 않았는데 국제사회가 6자회담을 재개하자면 우리 정부가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게 흐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중국이 북한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를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그 점은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계속 북한에 개혁·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빅터 차 “한·미, 北과 대화 재개해야”(10/21)

-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21일 “한·미 양국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북한 권력세습과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면 진행 중인 핵개발 프로그램을 멈출 수도 있고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 사과와 남북대화 재개 ▲고위급 북미대화 ▲6자간 베이징 예비회담 ▲6자회담 공식 재개 등 4단계 과정을 하나의 예로 들어 설명했다.
- 차 교수는 “문제는 북한이 항상 ‘나쁜’ 옵션과 ‘더 나쁜’ 옵션 중에서만 선택한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북한과 대화를 재개한다면 최소한 천안함 사건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전 셔크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산하 세계분쟁협력연구소(IGCC) 소장도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어프로치’를 통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



끌어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의 권력 세습이 안정화하기 전까지 정책의 변화 없이 선군정치가 계속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을 제외한 5자간 공조를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북한의 권력 세습과 이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음.

● “中, 北 급변사태 계획 협의 응해야” <美전문가>(10/21)

-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책임있는 이해당사자라면 북한 정권의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미국 및 주변 국가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한반도 전문가가 20일 주장했다.
-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동북아의 내일’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중국은 지금까지도 미국은 물론 역내 국가들과 구체적인 토론을 통해 비상계획을 짜는 일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리스 전 국장은 “북한 정권의 붕괴는 역내에 경제 및 안보관계에서 위험한 순간을 초래할 것이지만, 이런 사태는 이 지역에 새롭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음. 그는 “따라서 미국과 지역내의 다른 국가들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상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깊은 전략적 이해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 정권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권이 붕괴된다면 위기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북한의 주변 국가들은 미답의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와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사전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 리스 전 국장은 “특히 북한 및 이란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핵확산을 방지하는데 좀더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 “北 풍계리에 사람·차량 움직임 지속 포착”(10/21)

-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작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 사람과 차량의 이동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당장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이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장인 풍계리 일대가 전략시설로 중요한 곳이고 필요한 시설인 만큼 관리 차원의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풍계리를 비롯한 북한의 핵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다른 소식통은 “그곳(풍계리)은 버려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가는 움직임은 있을 수 있고 그것만으로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며 “핵실험은 지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움직임을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거기도 일종의 자기들이 가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사람들이 있고, 관리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최근 핵실험을 한다는 동향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 “北 새지도부, 경제개발 관심..6자재개 전향적”(10/19)

- 북한의 새 지도부가 앞으로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남북대화에 전향적으로 응하겠다는 뜻을 중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21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참석차 방한 중인 중국 양허우란(楊厚蘭) 한반도 담당대사는 최근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북·중 협의결과를 설명했다고 정부 소식통들이 전했다. 양 대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으며 남북 대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특히 북한의 새 지도부는 경제개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사는 이어 “북한이 경제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각국이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대화·접촉에 나서기를 희망한다”는 중국측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6자회담 재개와 남북대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중국측에 피력했지만 이것이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뚜렷한 상황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北제의 5자, NEACD서 6자재개에 이견>(10/19)

-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관련국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당국자들이 19일까지 이틀간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진행된 제21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균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수전 셔크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산하 세계분쟁협력연구소(IGCC) 소장과의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논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한국, 미국, 일본은 비슷한 입장을 밝혔고 중국, 러시아도 자기들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 김 단장은 이어 “내 경우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 자세를 보이는냐는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두가지를 같이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언급은 한국,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6자회담 재개의 조건과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됨.



- 한국, 미국, 일본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천안함 문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6자회담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임.
- 또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후계구도에 따른 북한 정세와 최근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영토분쟁 등도 논의됐음.
- 셔크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이웃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북한주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EACD에는 김 단장을 비롯해 성김 미국 6자회담 특사, 이시 마사후미 일본 총합정책국 대사, 중국의 양허우란(楊厚蘭) 한반도 담당대사, 그리고 리 로그비노프 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표가 참석했음.
-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낮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고 천영우 신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날 이들과 만찬을 가졌음. 1993년 IGCC의 주관으로 출범한 NEACD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교·국방관리 및 학자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반관·반민(1.5트랙) 성격의 다자협의체임.

● <NEACD서 6자재개 ‘컨센서스’ 나올까>(10/18)

- 제21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산하 세계분쟁협력연구소(IGCC)와 외교안보연구원 주최로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막했음.
- 반관·반민(1.5트랙) 성격의 NEACD에는 정부 대표로 우리 측에서 김홍균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미국측에서 성 김 6자회담 특사, 중국측에서 양허우란(楊厚蘭) 한반도 담당대사, 일본측 이시 마사후미 총합정책국 대사, 러시아측에서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6자회담 차석대표가 참석했음. 이들은 북한의 후계구도 변화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 등 한반도 정세를 전반적으로 다루게 됨.
- 특히 북핵 6자회담 재개 논의에 시선이 쏠림. NEACD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5개국 당국자들이 처음으로 회동하는 자리이기 때문임. 배궁찬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날 오전 환영사에서 “북한 핵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NEACD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앞서 김 단장은 전날 저녁 서울 시내에서 참석자들과 만찬 리셉션을 겸한 비공식 회합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회의 이틀째인 19일 6자회담 관련국 당국자들과 오찬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이 교착상태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포괄적인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특히 북한은 지난 16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 9.19 성명을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음.

- 이런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와 맞물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행보가 주목됨. 6자회담 차석대표인 양허우란 대사는 김 부상과 협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중국이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시설 모라토리엄 선언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관해 모종의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이 6자회담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6자회담 재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북한을 제외한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당장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함. 한편 수전 셔크 IGCC 소장은 18일 NEACD 개회사를 통해 “북한은 (회의에) 초대를 받았지만 오지 않았고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리근(북한의 미국국장)이 전하는 안부 인사를 여러분께 전한다”고 소개했음.

나. 미·북 관계

● 美특사 “인권문제, 북미관계에 중요한 영향”(10/22)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1일 “인권 문제는 미국이 최우선시하는 문제”라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 해소는 향후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음.
- 킹 특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2010 북한인권국제회의’에 참석,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자들의 고통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우리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이 국제 사회에 동참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우리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는 누가 (북한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것과 관계없는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북한의 3대권력 세습 문제와 관련,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을 추측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평양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북한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이웃국가들에 대한 위협 및 호전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9.19 공동



성명 이행을 포함, 비핵화를 위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킹 특사, ‘장마당 통한 北개방 지원’ 시사”<RFA>(10/20)

-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장마당’(시장)을 통한 북한의 개방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주목됨.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킹 특사는 19일(현지시간) 열린 미 평화연구소(USIP)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핵 문제만 논의해서는 안 되고 과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6자회담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교류 확대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데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RFA는 킹 특사의 이 발언에 대해, “장마당을 통한 북한의 개방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발언이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 RFA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과 장마당이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미 정부가 출연한 평화연구소와, 비영리 단체인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 중·북 관계

● 北, 주중 대사 6개월만에 전격 교체(10/24)

- 북한이 지난 4월 부임한 최병관(崔炳寬) 주중 대사를 6개월만에 전격 교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24일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최병관 대사는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과 일부 주중 외교 사절들에게 이임인사를 하고 지난 23일 평양으로 떠났음.
- 최대사의 후임으로 발령받은 지재룡(池在龍.68) 당 국제부 부부장은 25일 평양에서 중국군의 6.25 참전 6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베이징에 정식 부임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지재룡 신임 대사는 이미 중국 외교부로부터 아그레망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지난 4월 부임한 최 대사가 이번에 6개월만에 전격 교체된 것은 과거 주창준(朱昌駿) 전 대사가 1988년부터 약 12년간 근무한 데 이어 최진수(崔鎭洙) 전 대사 역시 2000년부터 10년여 베이징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임.
- 이와 관련, 베이징의 외교가에선 최 대사가 베이징에 부임한 후 외교적 활동이 상당히 적었다는 점으로 미뤄 그의 건강이상설과 함께 그의 임무 수행에 대한 견책설이 흘러나오고 있음.
-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5월 6일 방중을 끝내고 베이징을 떠날 때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당일 오후 7시30분께 베이징(北京)TV 대극장에서 북한피바다가극단의 ‘홍루몽’을 관람할 것이 예상됐으나 공동 관람이 불발되고 김 위원장은 특별 전용열차편으로 서둘러 떠나 북-중간에 불협화음설이 나돌았고 북측은 최대사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는 것임.

- 주중 대사의 전격 교체가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보임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이뤄진 점으로 미뤄 김정은이 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사실상 새 지도부의 구심점으로 등장하면서 ‘새판짜기’가 시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특히 최 대사가 북한 외무성에서 영사국장을 두 차례 역임한 행정통이라면 후임 지재룡 신임 대사는 국제부 부부장 출신으로 정통 노동당 인사라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 양국이 ‘노동당 대 공산당’ 교류를 확대,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주중 대사 교체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지 부부장은 1970년대 사로청, 조선학생위원회 등 청년 조직의 간부로 이름을 떨쳤고 1993년부터 국제부 부부장으로 활동해온 인물임. 김 위원장이 중국의 주요 인사와 회담할 때 동석하기도 했고 유럽이나 러시아와의 당 교류에 관여해왔다고 함.

● 北·中 수뇌부 ‘아리랑’ 관람(10/24)

- 중국인민해방군의 6.25전쟁 참전 60주년을 맞아 귀보슝(郭伯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비롯한 중국인민군 관계자들이 대거 방북한 가운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해 함께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하며 친선을 다졌음.
- 24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아리랑’ 공연에 자리를 함께 했음. 북측에서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최영림,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인 김영춘·김기남·최태복·양형섭·주상성,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양건·김영일·최룡해·리태남·김정각이 참석했음.
- 중국측에서는 귀보슝(郭伯雄)을 비롯해 마샤오펜(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퉁스핑(童世平) 총정치부 부주임, 리안동 총장비부 부부장, 진은하 총후근부 부부장, 왕홍요 심양군구 부정치위원, 풍조거 제남군구 부사령원, 조육민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부주임, 전리화 국방부 외사관공실 주임, 주도 총정치부 선전부 부장이 참석했음.
- 또 중국인민지원군 노병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왕하이(王海) 중국인민해방군 전 공군사령관,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 단장으로 참석한 려국여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부부장, 류홍차이(劉洪才) 북한주재 중국대사도 자리를 함께했음.
- 중앙방송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세대를 이어 공고히 발전시켜나가는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친선아리랑장(章)은 공연을 더욱 뜻깊게 장식했다”고 전했다.
- 안동춘 문화상은 이날 연설에서 “조중(북중)친선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피로써 맺어지고 역사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공동의 재부(재산)이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패의 친선”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방송은 이날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의 활약을 담은 예술영화 ‘형제의 정’을 만들어 내놓았다”고 전했다. 방송은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주년을 맞아 만든 이 영화는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조선전선에서 용약(용기있게) 펼쳐나와 상감령 전투에서 무비의(뛰어난) 용감성을 발휘한 황개강 영웅을 비롯한 중국 인민지원군 용사들의 빛나는 위훈을 감명깊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北·中 “軍친선협조 발전”(10/24)

- 북한 리영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참모장은 23일 중국 군사대표단을 위한 국방위원회 주최 연회 연설을 통해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그는 “미제 침략자를 반대해 항전을 벌이는 과정에 피로 맺어진 조중 친선의 유대가 더욱 강화됐다”며 “(북·중간) 공동의 노력에 의해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귀보승(郭伯雄)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발전되어온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새 세기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친선협조관계 발전의 전망을 확신하게 된다”고 화답했다.
- 연회에 앞서 리 총참모장은 귀 부주석을 단장으로 한 중국 군사대표단과 담화를 가졌다고 중앙통신이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각 군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정명도 해군사령관, 리병철 공군사령관 김명환 상장,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이 배석했다.

● 北시·도 책임비서, 中동북3성 방문 후 귀환(10/23)

-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단체 방문했던 북한의 시·도당 책임비서 12명이 7박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대표단이 20일부터 사흘간 지린(吉林)성의 지린시와 창춘(長春)시,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시의 식품가공 및 궤도교통, 화학공업, 기계제조 기업과 농업기지를 돌아봤다고 전했다.
- 또 대표단이 헤이룽장성 지빙쉬안(吉炳軒) 서기와 지린성 쑤정차이(孫政才) 서기를 만나고 각 성의 당과 창춘시·지린시 당이 마련한 연회에도 초대됐다고 덧붙였다.
- 대표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월말 방중 시찰 경로를 따라 이동



하며 해당 지역의 책임자를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 보임. 대표단은 또 김일성 주석이 어린 시절 다녔던 지린시 위원(毓文)중학교도 방문했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 북한의 9개도와 평양(직할시)·남포(특급시) 및 라선(특별시)의 책임 비서 12명이 한꺼번에 방중한 것은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시도 단위로 경제협력 방안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中군사대표단 방북, 지역안정 기여”(10/23)

-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60주년 기념일인 25일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중국군 고위 군사대표단의 방북이 북중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역내 평화를 지키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음.
- 신화통신은 이날 ‘역사의 배를 타고 평화의 돛을 펼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귀보승(郭伯雄)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이 이끄는 고위 군사대표단의 방북 의미를 이같이 부여했음. 통신은 “역사를 거울로 삼아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은 (한국)전쟁이 남긴 중요한 교훈”이라며 “어렵게 얻은 평화를 잘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전쟁에서 희생한) 선열들을 기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 국방부 외사관공실 첸리화(錢利華) 주임은 “현재 평화와 발전, 협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가 되었다”며 “중국은 각국과 더불어 세계와 지역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한편 신화통신은 귀 부주석이 방북 기간 북한의 당·국가 지도자와 군사 분야 지도자와 각각 회담해 양국 간 군사 문제를 비롯한 공통 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물론 그의 직책상 카운터파트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됨.

● 귀보승 中중앙군사위 부주석 방북(10/23)

- 귀보승(郭伯雄)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고위군사대표단이 23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공항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류홍차이(劉洪才) 북한주재 중국대사 등이 대표단을 영접했음.
- 대표단은 마샤오텐(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퉁스핑(童世平) 총정치부 부주임, 리안동 총장비부 부부장, 진은하 총후근부 부부장, 왕홍요 심양군구 부정치위원, 풍조거 제남군구 부사령원, 조육민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부주임, 전리화 국방부 외사관공실 주임, 주도 총정치부 선전부 부장 등으로 구성됐음. 중앙통신은 귀 부주석이 평양에 도착한 후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지만 그 내용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음.
-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진행된 환영의식에는 리영호



● 北문경덕 일행, 中 상하이·베이징 참관(10/21)

- 중국을 방문 중인 평양시당 책임비서 문경덕(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친선대표단이 상하이(上海)와 베이징(北京)시의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1일 보도했음. 지난 16일 중국을 방문한 이 대표단에는 평양과 함께 남포(특급시), 라선(특별시)에 9개 도까지 12개 시·도의 당 책임비서들이 모두 포함돼 있음. 방송은 “대표단은 2010년 상해 세계박람회 조선관과 중국관을 돌아봤으며 중국공산당 제1차 대회장 기념관, 상해 도시건설계획전시관, 동방명주(東方明珠) 텔레비전탑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주경기장과 베이징 도시계획전시관, 중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인 국가대극원, 철도부와 교통운수부 도로과학연구원, 베이징시 원림녹화국 등을 돌아봤다고 방송은 밝혔음.
- 이와 함께 대표단은 중국측 인사로 류치(劉淇) 베이징시 당서기,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났으며 대외연락부와 상하이·베이징시 당에서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북한 시·도의 당 책임비서들이 중국을 집단 방문한 것은 사상 처음인데, 문경덕은 지난 19일 저우용강(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의 모든 도와 시 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이 김정일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인민이 발전에서 거둔 성과를 직접 목격했다”고 말한 것으로 중국 매체가 전했다.

● <北中, 중공군 6.25참전 60주년 띄우기>(10/20)

- 오는 25일은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 60주년 기념일임. 예전과 달리 올해에는 북한과 중국 모두 이 행사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분위기임. 특히 북-중 군 인사들 간 교류가 부쩍 늘었음.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20일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중공군 노병들이 인민해방군 문예대표단과 함께 방북해 북중 우의를 다졌다고 보도했음. 이들은 중공군의 참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북했으며 북한의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연회를 베풀었다고 해방군보는 전했다.
- 이에 앞서 변인선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군 친선 참관단이 14일 중국을 방문해 인민해방군 부대 등을 둘러봤음. 이를 계기로 북중 양국 언론 매체의 ‘북중 우의’ 과시가 본격화하고 있음. 신화통신의 인터넷사이트인 신화망은 이날 ‘중국과 조선(북한)의 피로 맺은 우의가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제목으로 북중 우의를 강조하는 노동신문의 기사를 게재했음. 신화망은 노동신문을 인용해 “조중 양국민의 민족과 혈맥은 다르지만, 선대가 피로 맺은 우의가 이후 세대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더 아름답게 번창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에 국경은 그어져 있으나 양국 우의에는 한계가 없다”고 전



했음. 또한 “오는 25일이 중국 인민지원군의 6.25 전쟁 참전 60주년”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 노동신문은 최근 며칠새 ‘압록강 이천리’를 포함해 북중 우의를 강조하는 세 편의 장시를 게재했으며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를 그대로 전하고 있음.
- 중국 관영매체들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동정 보도도 크게 늘었음. 신화통신은 지난 19일 김 위원장의 평양 옥류관 방문 기사를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게재했음. 아울러 같은 날 김 위원장이 ‘량산백과 축영대’ 공연을 관람하고서 “중국 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 60돌이 되는 때 중국 동지들의 협조를 받아 또 한 편의 가극을 완성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며 “조중 친선을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 “北 새지도부, 경제개발 관심”(10/19)

- 북한의 새 지도부가 앞으로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남북대화에 전향적으로 응하겠다는 뜻을 중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북·중 협의결과를 설명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중국측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남북 대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새 지도부가 경제개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우리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측은 이에 따라 관련국들이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대화·접촉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6자회담 재개와 남북대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중국측에 피력했지만 이것이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뚜렷한 상황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中저우융캉, 北노동당 친선대표단 만나(10/19)

-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경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단장으로 한 노동당 친선대표단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이 자리에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류제이(劉結一)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최병관 중국주재 북한대사가 배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저우융캉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이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한 것은 “두 당, 두 나라 친선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준다”면서 “김정일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노동당의 영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밝혔음.



- 저우융캉 상무위원은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10.10)을 맞아 중국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바 있음. 한편 서울에서 수신된 중국의 국제방송(한국어방송)도 이날 저우융캉 상무위원이 노동당 친선대표단을 만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는 “조선(북한) 각 도, 시 노동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중국 단체 방문은 중국과 조선 관계사상 처음”이라면서 이들이 방문하는 중국 각 지역의 관계자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원했다고 밝혔음.
- 그는 또 최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의 기본 노선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했다면서 “이 회의가 원만한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김정일 동지에게 전달하길 부탁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문 책임비서는 “이번에 조선 모든 도와 시 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이 김정일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인민이 발전에서 거둔 성과를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중시진핑 ‘차기’ 예약·북중관계 어떻게 될까>(10/19)

-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차기 ‘최고지도자’ 자리를 굳혀 향후 북중 관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됨.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의 북중 관계가 중국 지도부의 변화에 흔들릴 만큼 가변적이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임.
- 양국이 입만 열면 거론하는 ‘전통적 우호관계’가 엄존하는데다, 전략적 측면의 상호 협력과 공조가 눈에 띄게 느슨해질 것 같지도 않다는 얘기임. 게다가 시 부주석의 개인적인 ‘북한관(觀)’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거의 없는 게 현실임.
- 실제로 배석자가 아닌 ‘좌장’으로서 시 부주석이 북한 지도부를 만난 경우는 2000년 이후 단 3차례인데, 그중 2차례는 북한을 방문한 것이었음. 시 부주석은 2008년 6월 취임 후 첫 외교활동으로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고, 저장(浙江)성 당 서기였던 2005년 7월에는 중국공산당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해 조선노동당과 회담을 가졌음. 작년 11월에는 중국을 방문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만나 “(북한과) 소통과 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음.
- 시 부주석이 가장 최근 북한에 대한 언급한 것은 지난 8일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경축연회에서였음.
- 그는 당시 “북한 노동당의 새 지도체제와 함께 전통을 이으면서 미래로 향하고, 선린우호하며 협력의 정신을 강화해 중국과 북한의 우호협력 관계를 진일보시킬 것”이라면서, 북한의 후계체제를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받았음.
- 시 부주석의 이런 발언을 놓고, 장차 ‘시진핑 시대’가 열리면 북중



간 교류, 협력이 한층 더 돈독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나왔으나, 다른 편에서는 우방국인 북한의 경축일을 맞아 ‘덕담’을 건넨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제기됐음.

- 일각에서는 중국의 최고지도자 자리를 예약한 시 부주석이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만날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임.
- 중국 측은 이미 북한 노동당 창건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지난 9일 방북한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새 지도부가 편리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초청 메시지를 전달했음.
- 김 위원장의 경우 후계자로 공식화되고 3년 뒤인 1983년 6월 처음 중국을 비공식 방문해, 당시 후야오팡(胡耀邦) 중국공산당 총서기, 덩샤오핑(鄧小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리셴넨(李先念) 국가주석, 평진(彭眞)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지도부를 대부분 만났음. 이런 전례에 따라 북한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정은이 가까운 장래에 중국을 방문하면 시 부주석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임.
- 다만 중국 측이 초청한 ‘북한의 새 지도부’를 김 위원장이 이끌지, 아니면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정은이 사실상 이끌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 <김정은 등장후 北-中교류 전방위 확대>(10/19)

- 북한의 김정은이 공개석상에 등장하면서 북한과 중국 간 교류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돼 주목됨. 지난달 28일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와 이달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 행사를 계기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이 사실상 후계로서의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북중 교류가 전례없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지적임.
- 북한은 당 대표자회가 폐막한지 이틀만인 지난달 30일 노동당의 최태복 중앙위원회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보내 김 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재추대와 김정은의 대장 임명 및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선출 사실을 통보했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최 비서를 직접 만나 축하했음. 이어 중국은 노동당 창건 행사에 이례적으로 저우융캉(周永康)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내 축하했음.
- 저우 상무위원은 서열 9위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로 볼 때 후 주석과 권력을 균점한 9명의 수뇌부 가운데 한 명임. 이에 김 위원장은 정식 회담을 포함해 세차레나 저우 위원과 회동하는 ‘과격’을 보였음. 또 김 위원장은 후 주석의 방북을 초청했고 후 주석은 저우 상무위원을 통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새 지도부의 방중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했음. 베이징의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65주년 행사에는 제17차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자리를 꺾자 중국의



- 차기 대권을 예약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음.
- 이러한 북중 정상간 소통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 북한 고위인사들이 붓물 터진듯 중국에 몰려오는 모양새임. 매주 화·목·토에 평양-베이징을 오가는 고려항공편은 연일 만석에 가깝다는 전언임.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13~16일 방중해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북핵 6자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했고 북한의 영사협상 대표단이 12일 중국을 찾아 북중간 제11회 영사협상을 벌였음.
 - 지난 16일에는 북한의 ‘젊은 피’로 알려진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친선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공산당 베이징 시당 서기 등과 교류한 것으로 전해졌음. 53세인 문경덕은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70~80대가 주를 이룬 당 고위직 인사들 틈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 비서국 비서, 중앙위원 타이틀을 거머쥔 인물임. 또 변인선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군 친선참관단이 14일 중국을 찾았음.
 - 중국의 왕자오궈(王兆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용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가 이끄는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대표단과 만나 담화하기도 했음. 경제적인 교류도 활발함. 특히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과 마주한 투먼(圖們)에서는 무관세 호시무역이 개시됐고 투먼시에서 북한 근로자 고용에 나서는 등 대북 경험의 속도를 내고 있음.
 - 중국의 동해 진출 통로인 라진항 부두 보수공사와 청진항 3, 4호 부두 보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곧 중국의 동해항로 이용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의 매체들은 최근 북중 친선을 부쩍 강조하고 있으며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들 역시 대동소이함. 노동신문이 북중 우의를 주제로 18일 ‘압록강 2천리’라는 시를 게재하자 신화통신은 다음날인 19일 이를 인용해 전하기도 했음.
 - 신화통신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의 옥류관을 찾아 인민의 식생활 개선에 노력하라고 했다는 이른바 동정기사를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게재해 눈길을 끌었음.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시사잡지 환구인물은 최근호에서 ‘김정은, 조선(북한)의 신비한 후계자’라는 제목으로 김정은의 등극 과정과 후계자 선정 배경, 인물 면면을 8면에 걸쳐 자세히 소개했음. 중국 매체들은 최근 김정은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등 이미지 제고에 나서는 모양새임. 중국이 김 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의 실물 크기 밀랍상을 제작해 12월 초에 선물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림.

● 北김정일, 중가극 관람 후 “북중친선 불변” 강조(10/19)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전통가극 ‘량산백과 축영대’를 피바다가극단이 개작한 공연을 관람하고 “중국 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



참전 60돌이 되는 때 중국 동지들의 협조를 받아 또 한 편의 가극을 완성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며 "조중 친선을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했다.

- 김 위원장은 또 "문화교류는 나라들 사이의 호상 이해를 두터이하고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피바다가극단을 비롯한 예술단체들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공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이 가극 '량산백과 축영대' 개작 사업을 보고받고 "창조중(연습중)에 있는 가극을 보셨다"고 전하기도 했다.
- 공연 관람에는 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최태복·홍석형(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 강석주(내각 부총리)와,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당 비서)가 수행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했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수행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 '량산백과 축영대'는 남녀 간 애정을 소재로 한 월극(여성 배우들만 출연하는 지방극)으로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라는 평가 속에 큰 인기를 끌어 같은 타이틀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 中 접경지역, 북한 근로자 대거 유입(10/18)

- 북한과 가까운 중국의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투먼 등지에 북한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린성의 조선족자치주 투먼시는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 근로자 100명을 이달 중 받아들일 방침이며, 단둥시도 약 1천명의 북한 근로자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북한과 가까운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국경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새 고임금을 찾아 한국과 일본, 중국의 연안 도시 등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빚고 있음.
-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건비가 급등하자 이 지역의 기업체들은 저렴한 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음. 경제가 어려운 북한으로서는 외화획득의 호기가 되고 있음. 투먼시의 경우 인구 13만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대북 무역의 거점 중 하나임. 북한 근로자들은 주로 대북 무역 관련 기업이 밀집한 '북한공업단지'에 있는 플라스틱공장 등에서 일하게 됨. 투먼시는 북한 근로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북한 측 숙소와 중국의 공장을 버스로 왕복하는 통근형태를 검토하고 있음.



-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북한으로 수출하는 외에 철도로 연결된 북한의 청진항을 통해 항로로 한국, 일본 등으로 수출될 계획임. 이르면 다음 달 청진에서 한국의 부산으로 향하는 화물선의 시험운항도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日 정부 “일본행 탈북자 현재 100명 이상”(10/20)

-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부(副)대신은 20일 지금까지 일본에 입국한 탈북자가 100명 이상이라고 밝혔음. 마쓰모토 부대신은 이날 참의원(상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에서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일본에 입국한 탈북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100명을 넘는다”고 말했음.
- 이들 대다수는 1960~70년대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 동포나 일본인 처, 가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음. 마쓰모토 부대신은 상세한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등은 일본행 탈북자가 약 18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음. 아리타 의원은 지금도 중국 내 일본 공관에 탈북자 10여 명이 머물고 있고, 길게는 2년 가까이 중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요청했음. 이에 대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은 “보호 중인 탈북자의 조기 출국은 관계국(중국)의 의향을 고려해가며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음.
- 한편 마에하라 외상은 “북한에 대해 우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장(場)이 생기고, 납치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 (6자) 회담에 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라며 일본인 납치 문제를 6자 회담 재개의 전제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마에하라 외상은 또 “대화 채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음.
- 하지만 “핵이든, 납치든(북한이) 아무것도 진전시킬 뜻이 없는데도 일단 모이고 보자는 건 의미가 없다”며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음.

● “日 한일강제병합 100년 담화, 北도 대상”(10/19)

-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지난 8월 식민지 지배와 관련, 한국에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가 북한에도 적용된다는 인식을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간 총리는 18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출석해 ‘담화의 인식이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한일 강제병합 해인 1910년) 당시는 한국이 하나의 국가였으므로 그런 의미가 포함됐다고 이해하기 바란다”고 밝혔음. 이는 지난 8월 10일 나온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의 대상에 한국과 함께 북한도 포함됐다는 뜻이어서 주목됨. 이는 간 총리의 담화 발표 직후인 8월 13일



당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국교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화의 발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음.

- 당시 오카다 외상은 “일북(북일)간에는 국교가 정상화 돼있지 않다. (식민지 지배의 영향은)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전후 문제에 대해 일북간에는 일한(한일)기본조약 같은 것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담화를 발표할 수는 없다” 말했다.
- 이는 우선 국교정상화와 함께 과거 문제에 대한 법적 청산을 한 뒤에야 사죄 담화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었음. 오카다 당시 외상은 또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일본에 사죄 담화를 요구할 경우 대응책에 대해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음. 북한도 간 총리의 담화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월 20일 ‘한일합병은 일본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국가테러’라는 제목의 ‘고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권 강탈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으려는 강도적 본성이 (담화에) 담겨 있다”면서 “담화가 남조선만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러한 처사는 명백히 우리 공화국과 인민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죄악”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10월말 연합항모강습단 훈련 취소(10/24)

- 한국과 미국이 10월 말께 서해상에서 실시키로 검토했던 연합항모강습단 훈련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24일 “이달 말로 검토됐던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이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훈련은 연내에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미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일련의 연합훈련 하나로 이달 말께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항모강습단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음. 소식통은 “지난 9월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대잠수함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다시 대규모 훈련을 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제약이 있다”면서 “당분간 동·서해상에서의 연합훈련은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가 연내에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으로 풀이됨. G-20 행사를 앞두고 동·서해에서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주변국을 자극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임. 이에 국방부는 “이달 말 항모강습단 훈련 실시와 관련해서는 미측과 시기와 참가 전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며 “지난 연합훈련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실시될 훈련에 대해서도 한미간 사전에 긴밀한 협의하에 세부 훈련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 한·미는 이달 말 서해 만리포에서 진행기로 한 양국 해병대의 대규모 상륙훈련도 G-20 정상회의 이후인 11월 말로 연기했음. 군 관계자는 “상륙훈련 연기는 G-20 정상회의와 무관치 않다”면서 “11월 말에 실시될 예정인 훈련 장소도 동해 또는 서해가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음.

● 美 태평양사령관 “北 핵실험시 심각한 상황초래”(10/22)

- 로버트 윌러드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22일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 뿐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윌러드 사령관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제13차 아.태지역 군 고위급(CHOD)회의를 마친 후 한민구 합참의장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그같이 말했음.
- 그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한반도 뿐아니라 아.태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참가국이 모두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민구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주시하고 있으며 그런 실험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미동맹으로 잘 억제할 것”이라며 “참가국들은 북한 핵이 아.태지역 안보의 최대위협 요소라는 인식을 했으며 군사 이상의 차원에서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전했다.
- 한 의장은 “한·미·일 다자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위협에 인식을 같이하고, 3자간 협력의 필요성과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모든 참가국이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조체제와 군사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음. 특히 윌러드 사령관은 내달 서울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 “미국 국방부는 이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에 필요한 전력을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미 태평양군사령부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감시전력 등 모든 전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우리측은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측에 고공전략정찰기인 U-2와 조기경보통제기(AWACS)의 증편 감시정찰, F-22(랩터) 1~2개 편대의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미 태평양사령관에게 한국의 전력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 최석영 “한미FTA, 내년 7월 발효 시간 촉박”(10/19)

-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19일 한미간 FTA 쟁점현안에 대한 실무협회가 내달까지 진전을 이루더라도 미국 내부 비준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년 7월1일 한·EU(유럽연합) FTA 발효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발효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 최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미간 FTA 실무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내달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FTA 관련 양측간 협회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을 예단할 수 없을 정도로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내달 G20 서울 정상회의 전에 한미간에 FTA 쟁점현안에 대해 진전을 이루더라도 미국내 비준절차가 복잡해 상당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미 행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하더라도 의회는 90일간(의사일정 기준) 논의할 수 있고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마치더라도 한국에 이를 통보한 뒤 60일이 지나야 FTA가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일부 해외 언론이 한국이 한·EU(유럽연합) FTA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도 내년 7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한 데 대해 “발언내용의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면서 “한·미 FTA 조기 발효에 대한 희망을 표시한 것일 뿐 한국 정부가 발효 시기 목표를 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 한·미 FTA를 서두를 경우 한·EU FTA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발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해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기가 한·EU FTA 발효시기와 비슷한 시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내년 7월1일에 발효하기엔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 원자력협정-파이로 프로세싱 투트랙 논의”(10/18)

- 한·미 양국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처리 공법) 공동연구를 ‘투트랙’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외교통상부가 18일 밝혔다.
-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파이로 프로세싱의 건식 재활용 문제는 (협상과는) 별도로 공동의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는 현단계에서 파이로 프로세싱 도입 문제가 조기 논의될 경우 핵연료 재처리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 협상 흐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을 위한 첫 공식협의를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수석대표로는 우리측에서 조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미국측에서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 및 군축담당 국무장관 특보가 나섬. 우리측 대표단은 외교통상부 내 한·미 원자력협정 태스크포스와 조약국, 북미국, 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로 구성됨.

- 김 대변인은 협상의제와 관련, “양국의 핵 비확산 정책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1차 협상이기 때문에 기본 입장에 대한 의견교환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 한·중 관계

● “中지도자에 외교적 결례 야기해 유감”(10/22)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오전 장신선 주한 중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 훼방꾼’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장 대사에게 “박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으로 인해 중국 지도자에게 외교적 결례를 야기하게 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음. 이에 대해 장 대사는 “본국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외교상 한·중 양국관계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 中 “시진핑 ‘훼방꾼 발언’ 사실 아니다”(10/21)

- 최근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돼 사실상 차기 중국 국가주석으로 확정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한국 정부를 가리켜 ‘한반도 평화 훼방꾼’이라고 말했다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이를 공식 부인했음.
- 민감한 외교 문제에는 좀처럼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중국 정부가 이처럼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일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한 민주당 의원이 ‘시 부주석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 왜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훼방하는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마 대변인은 “우리도 관련 보도와 한국 정부의 해명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해 중국도 한국에서 시 부주석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음.



● 김외교 “‘평화훼방꾼’ 발언 없었다”(10/21)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으로부터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 훼방꾼’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제(20일)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당시 면담요록을 확인하고 대사관 관계자들에게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음. 김 장관은 특히 “(시 부주석)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파견한 현직 대사가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외교장관으로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음.
- 김 장관은 이어 “시 배석한 대사관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시 부주석이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한국의 정책에 불만을 표현한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시 부주석은 지난해 5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면담 당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보다 더 강경한 정책으로 나가니까 중국이 어떻게 할 여지가 없다’며 ‘왜 같은 동포가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 <中 시진핑 이후 한중관계 전망은>(10/19)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돼 차기 지도자로 입지를 사실상 굳힘에 따라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은 북중관계, 남북관계 등에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한중관계의 우호협력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임.
- 우선 중국은 한국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상대로 생각하는 만큼 양국간 발전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얘기임. 당장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의 신뢰가 더 두터워지고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가 심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큼.
- 또 중국의 대외정책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진핑 부주석 혼자 이끌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임. 중국의 국가주석은 국내 정책에서는 비교적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낼수 있지만 대외정책에서는 기존의 큰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함.
- 다만 시진핑 부주석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이라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옴. 후진타오 주석이 2003년 정권을 잡은 뒤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시기로 평가할 수 있음. 나아가 시진핑 부주석이 권좌에 올랐을 때에는 미국과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시기로서 한국에 대한 외



교정책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음. 중국이 그동안 한국과 양자관계로서 협력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제질서의 큰 틀에서 한국을 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임.

-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19일 “중국은 앞으로 G20 정상회의 같은 국제관계의 틀에서 한중관계를 관리해나갈 공산이 크고 이 과정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 중국과 협력하는 방식이 바뀌는 상황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일각에서는 시진핑 부주석이 과거 저장(浙江)성 당 서기 시절부터 한국의 지도자들과 교분을 많이 쌓은 ‘지한파’로 알려져 있는 만큼 대(對) 한반도 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 시진핑 부주석은 그동안 방한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정부와 정계의 최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났고 저장성 당서기 시절 한국을 방문해 SK, LG 등 기업인들과도 친분관계를 맺었음.

다. 한·일 관계

● 한·일학계 “日 무력으로 한국병합 단행”(10/22)

- 한·일 양국 학계인사 26인은 22일 올해 100년을 맞는 강제병합의 성격과 관련, “일본은 무력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한국병합을 단행했다”고 밝혔음.
-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위원장인 하영선 서울대 교수와 오코노기 마사오(小比 木政夫)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일 신시대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보고서는 “식민화 과정 및 이후의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수많은 손해와 고통 및 민족적 한이 1945년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한·일관계 정상화를 방해하는 커다란 요인중 하나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역사의 사실을 직시해 결코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억에 새기면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야말로 앞으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이어 한·일관계의 미래 비전으로 ‘한·일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고 “한·일 양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NGO(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지식정보, 과학기술, 환경생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전면적으로 구축해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공영을 도모하는게 한·일관계의 미래상”이라고 밝혔음.
- 보고서는 또 대미관계와 관련, “한·일 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대외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왔다”며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은 대미동맹의 발전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으며 한·미·일의 공조관계를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음.



- 보고서는 “한·일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이 중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와 상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국제규범, 제도와 관행에 유연하고도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문제의 해결은 양국이 당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한·일 양국은 핵개발이나 납치 등의 핵심적 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한다”며 “6자회담을 활성화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내용의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6자회담을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국간 안보협회의 장소로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북한의 핵폐기를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한반도의 평화체제, 필요한 경제지원,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 등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함께 노력한다”며 “한국은 북·일 국교정상화를, 일본은 남북 협력관계의 확대 및 최종적으로는 통일을 환영하고 각각의 과정을 통해 양국은 긴밀히 제휴하고 협력한다”고 밝혔다.
 - ‘공동연구’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회담을 개최해 한·일관계의 발전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을 건의했음. 보고서에는 ‘한·일 신시대 어젠다 21’로 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경제 등 3개 분야에 걸쳐 21개 과제가 제시됐음.
 - 한·일관계는 ▲역사화해 노력 ▲고위급 대화 활성화 ▲교류 네트워크 강화 ▲캠퍼스 아시아 실현 ▲동아시아 지식은행 ▲멀티미디어 협력 ▲해저터널 추진
 - 국제정치는 ▲공생 복합 네트워크 강화 ▲대북정책 공조 ▲안전보장 협력 강화 ▲신아시아 질서 공동구축 ▲지구적 안보협력 ▲에너지 환경협력 ▲글로벌 거버넌스
 - 국제경제는 ▲공생 번영 네트워크 구축 연구 ▲포괄적 FTA 체결 ▲금융질서 안정화 협력 ▲금융질서 장기발전 협력 ▲정보통신 협력 ▲개발협력 ▲환경사업 기회확대 방안이 포함됐음.
- **日 재무상 “한국 비판했다는 건 오해”(10/19)**
- 한국과 중국의 환율 정책을 비난했던 일본 재무상이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음. 노다 요시히코(野田) 재무상은 19일 일본 국회에서 자신의 발언이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다소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음.
 - 그는 한국 원화에 대해 “개별 국가의 외환정책에 대해 말한 것이 아



나라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환율 문제가 중요한 주제가 될 테니까, (한국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유연화가 진전되길 기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앞서 노다 재무상은 13일 일본 국회에서 “한국이 원화 환율에 수시로 개입하고 있고, 중국도 지난 6월 외환제도 개선을 통해 위안화의 유연화 노선을 택했으나 걸음이 지체되고 있다”며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그 역할을 엄하게 추궁당할 것”이라고 발언했음.
- 그는 이후 한국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일본 재무성 국제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하게 항의하고, 일본측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한 뒤에도 “(한국의 항의를) 알지 못한다”고 단전을 피우기도 했음.

라. 미·일 관계

● “미·일, 대중 전략협의 강화기로” <日紙>(10/24)

-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급속한 군비확장과 관련해 대(對)중국 전략 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합의는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이 만났을 때 미국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음.
- 당장 별도의 논의 틀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각료급에서 실무자 수준에 이르기까지 정치·안전보장 분야 협의를 더 자주 열기로 했음. 이에 따라 이달 12일 양국 외교부 차관급 회의가 열렸고, 27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 예정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식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음.
- 신문은 오바마 정권이 지난해 말까지 세계적인 금융위기나 기후변동 문제에서 중국과 협조를 모색했지만 중국이 동중국해 진출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일관계를 중심으로 아시아 외교를 전개하는 종래 방침으로 돌아갔다는 점이 이번 제의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음.

마. 중·일 관계

● 中 반일시위 확산..쓰촨서 1천여명 시위(10/24)

- 다오위다오(釣魚臺,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영유권 문제로 촉발된 중국인들의 반일(反日)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음. 주말인 23일 오후 쓰촨(四川)성 더양(德陽)시에서 시민 1천여명이 반일 시위를 벌였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문화보(文匯報) 등 홍콩 신문들이 24일 보도했음.
- 더양 시민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시내 중심가 광장에 집결해 집회를 가진 뒤 반일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구호를 외치면서 거



- 리 시위를 벌였음. 시위대는 방패와 헬멧으로 무장한 경찰들과 충돌하기도 했다고 홍콩 신문들은 전했다.
- 더양에 이어 24일에는 산시(陝西)성 바오지(寶鷄)와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까지 시위가 발생했음. 특히 바오지에서는 가두 시위대가 ‘일본 상품 불매’ 문구와 함께 ‘관료 부패에 반대한다’, ‘높은 집값을 잡아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당국을 긴장시켰음.
 - 란저우에서는 학생이 주축이 된 200명의 시위대가 대일(對日) 강경노선을 취해야 한다며 일본에 ‘다오위다오 반환’을 촉구했음. 이밖에 허난(河南)성 카이펑(開封),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장쑤(江蘇)성 난징(南京) 등지에서도 반일시위가 번졌음.
 - 반일시위가 잇따르자 더양, 창사시를 비롯한 중국 지방 정부들은 학생들에게 수업에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명령했음. 또 상하이(上海), 충칭(重慶)시 공안당국은 일본 총영사관 주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은 주말 반일시위 속에서 일본인 피해 소식은 없다고 전했다.
 - 이런 가운데 23일 일본에서도 중국인들의 반일시위에 맞서 반중(反中)시위가 펼쳐졌다고 홍콩신문들이 전했다. 이날 도쿄에서 600km 가량 떨어진 다카마치시에서 시민 300여명이 제국주의 시절 사용했던 일장기를 앞세우고 반중시위를 펼쳤음.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4일 도쿄 근교의 군 사열 행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과 중국의 군현대화, 해군 활동 강화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음. 간 총리는 이어 “자위대는 각종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동맹 강화를 역설했음.
 - 또한 오히타 아키히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도쿄에서 장야오핑(蔣耀平)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만나 희토류 대일 수출 제한으로 양국이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수출 정상화를 촉구했음. 이에 대해 장 부부장은 밀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지 의도적인 대일(對日) 희토류 수출 제한은 아니라고 말했음.

● 中 “日과 ‘다오위다오 밀약’ 없었다”(10/22)

- 중국은 21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문제와 관련, 일본과 아무런 밀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 집권 당시 다오위다오 문제에 관해 밀약을 맺었다는 한 일본 관리의 말에 대해 논평해 달라는 기자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음.
- 이른바 중일간 밀약의 내용은 당시 일본이 다오위다오에 상륙한 중국인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중국은 자국 선박들이 다오위다오 부근 해역에 다가가지 않도록 제지하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마자오쉬



대변인은 밀약설은 중상모략이며 음흉한 심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민의를 호도할뿐만 아니라 중일간 정치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마 대변인은 이어 일본 측은 이번 밀약설로 야기된 일체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필요하면 언제나 닌자오위다오에서 어로작업중인 중국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파견, 순시하고 있다고 말했음.

● 中, 日에 센카쿠 공동개발 제안”(10/22)

- 중국이 일본에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尖閣: 중국명 닌자오위다오<釣魚島>)를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중순 센카쿠 주변의 해저 자원을 공동 개발하자고 일본 측에 요청했으나 일본은 즉각 이를 거부했음.
- 이 통신은 “중국이 구속했던 일본 건설회사 후지타의 현지법인 사원을 석방한 지난 9일 이후 외교루트를 통해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문제를 보류하고 중일 관계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센카쿠 공동개발을 들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중국은 과거에도 공동개발을 타진한 경위가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에 ‘닌자오위다오가 중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침투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 한편 산케이신문은 이날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의 가스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일본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음. 중국 측이 설정한 조사해역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인 ‘중일 중간선’으로, 지난 2001년 양국이 합의한 ‘해양조사의 상호사전통보’제도에 따라 중국이 해양조사를 통보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중국의 이번 해양조사 해역은 양국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시라카바(白樺.중국명 춘샤오<春曉>)를 비롯한 가스전이 있는 곳을 포함하고 있음.

● 中, 닌자오위다오에 어업지도선 3척 투입(10/20)

-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불거진 반일, 반중 시위 여파로 겨우 봉합 국면에 들어서는 듯했던 닌자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닌자오위다오에 어업지도선을 더 투입하기로 했음. 중국 농업부 산하 어정국(漁政局)은 닌자오위다오 해역에 1천t급인 ‘위정(漁政)202호’, ‘위정(漁政) 118호’와 500t급 선박 등 어업지도선 3척을 파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음.
- 어정지휘센터 쥬리(居禮) 부주임은 지난 14일 열린 출항식에서 “닌자오위다오 해역 순찰은 국가 주권을 지키고 어민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힘들지만 중대한 임무”라고 격려했음. 이에 앞서 중



국은 이미 다오위다오 부근에 ‘위정 201호’와 ‘위정 203호’를 상주시키고 있었음. 신화통신은 그러나 이번에 파견되는 어업지도선 3척이 다오위다오 인근의 전력을 증원하려는 차원인지 아니면 기존의 어업지도선을 대체하는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음. 중국의 어업지도선은 군함을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역시 3천t급인 PLH09호를 순시선으로 보내는가 하면 P-3C 정찰기와 헬리콥터 등을 순찰활동에 동원하고 있음. 이 때문에 다오위다오 해역에서는 일본 해양 순시선과 중국 어업지도선 간에 조우가 잇따르는 등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음.

● 中 “반일시위 조직 안했다”(10/19)

-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부가 반일시위를 조직했다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음. 마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일시위를 정부가 직접 조직하거나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음.
- 그는 “일본의 잘못된 언행에 대한 일부 군중의 의분은 이해하지만 애국적 열정은 법에 따라 이성적으로 전달돼야 하며 비이성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음. 마 대변인은 다오위다오(釣魚臺,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문제와 관련해 비록 중일 양국 사이에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서로 마주보며 함께 양국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 입장도 밝혔음.
- 그렇지만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이 중국인들의 반일시위를 거론하며 “중국의 반응과 대응 조치들이 매우 병적(hysterical)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일국의 외교수장으로서는 이런 언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며 “일본 지도자의 이런 발언은 양국관계 개선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 마 대변인은 이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때 간 나오토 총리와 원자바오 총리가 공식회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본이 실질적 행동으로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는 성의를 보여 회담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음.
- 아울러 일본에 희토류 수출이 계속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모든 국가는 자국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중국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법규에 따라 필요한 관리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중국의 발전 뿐만 아니라 세계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답했음. 한편 이날 오전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에다 사츠키 전 일본 참의원 의장과 만났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마 대변인은 “오랜 친구간에 사적으로 만난 것일 뿐 회견이나 회담은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음.



● 中日, 센카쿠 갈등속 베이징서 회동(10/19)

-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19일 회담을 가졌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음.
- 통신에 따르면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에다 사츠키 전 참의원 의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음. 양측은 간 총리와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베트남과 일본에서 열리는 지역 정상회의에서 만나는 것이 “양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두 정상 회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양국은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 사건 이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 관계의 회복을 모색함.
- 일본 무역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어선 나포 이후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음. 오하타 아키히로 경제산업상은 이날 선적이 일부 재개됐지만 수출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며 “담당 관리들에게 중국 측과의 회담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음.

● 中 반일시위 사흘째..우한서도 경찰과 충돌(10/19)

- 댜오위다오(釣魚臺.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영유권 문제로 촉발된 중국인들의 대규모 반일 과격시위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음.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유감표명에도 불구하고 18일 오후 후베이(湖北)성 성도인 우한(武漢)시에서 시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일 시위가 펼쳐졌다고 홍콩경제일보, 명보 등 홍콩 신문들이 19일 보도했음.
- 우한시 시민 1천여명은 18일 오후 2시께 ‘대학구 광장’에 집결해 ‘댜오위다오를 지키자’(保衛釣魚臺)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음. 일부 시위대는 일본인 소유의 상점과 일본제 승용차를 공격하기도 했으며, 이런 과격행위를 제지하는 공안과 충돌했다고 홍콩 신문들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에서 약 5만명이 반일시위를 벌인 데 이어 17일에는 쓰촨성 멨양(綿陽)시에서 3만명이 거리시위에 나섰다.
- 특히 멨양시에서 벌어진 반일시위에서는 일본 라면 체인점 ‘아지센’(Ajisen), 도요타자동차 매장, 마쓰시타전기 대리점, 파나소닉 전자대리점 등 일본 관련 상점들이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파손되기도 했음.

● <日 “시진핑은 대일 강경파?” 큰 관심>(10/19)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차기 최고 지도자 자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데 대해 일본은 조심스럽지만 큰 관심을 보이며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나섰다.
-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18일 밤 시 부주석이 공산당 중앙군사위



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어느 분이 차기 국가주석이 될지,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음. 간 총리는 또 “누가 (후계자가) 되든, 일중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진전시키도록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덧붙였음.

- 일본 언론은 ‘시 부주석이 사실상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후계자로 확정됐다’는 등 한층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음. 아사히, 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 마이니치 등 주요 조간신문은 시 부주석이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된 사실을 일제히 1면 머리기사로 전했고, 시 부주석이 누군지 소개하는 기사와 ‘시진핑 시대’의 중일 관계를 전망하는 분석기사, 사설 등을 함께 실었음. 특히 일본 언론은 시 부주석이 역사 문제를 중시한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인맥이나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음.
- 후 주석이 대일관계를 중시해 일본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반면, 시 부주석은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다만 시 부주석이 지난해 12월 방일했을 때 한달 전에 미리 면담 요청을 해야 하는 관례까지 어겨가며 아키히토(明仁) 일왕을 만나는 등 파격적인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에 희망을 품기도 했음.

● “日 현정권이 中·日 비밀합의 깬다”(10/19)

- 최근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충돌을 둘러싼 분쟁은 일본의 현 정권이 기존 정권에서 맺어진 양국 간의 비밀 합의를 깬기 때문에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음. 아사히신문사가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아에라(AERA)’는 18일 일본의 과거 보수정권은 중국 정부와 동중국해 도서와 관련된 응급상황 관리에 관한 비밀 합의를 체결했었지만 중도 좌파인 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존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음.
- 잡지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비밀 합의는 일본이 센카쿠에서 중국인의 상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심각한 위협요소가 없다면 이들을 구금하지 않는다는 것과 중국 정부 역시 반일 시위자들의 선박이 이 섬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일본 총리는 18일 워싱턴을 방문, 중국이 분쟁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 이는 히틀러의 ‘레벤스라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아베 전 총리는 “동중국해를 비롯한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해군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국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음.
- 그는 중국의 이같은 영향력 확대를 독일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생존공간(레벤스라움)을 확보해야 한다는 히틀러의 이념과 연결짓는 사람들도 있다고 꼬집었음. 아베 전 총리는 그러면서 양국간 갈등을



둘러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음. 그는 “중국과의 분쟁 과정에서 일본이 중국의 압력에 밀려 선원과 선장을 석방한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다”면서 “총리실의 상황 대응 역시 매우 순진했다”고 지적했음.

● 中 “구글, 다오위다오 삭제 日요구 거절”(10/18)

-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제기한 중국명 표기 삭제 요구를 구글이 거절했다고 해방일보(解放日報) 등 중국 언론이 18일 보도했음. 중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요구에 대해 구글이 ‘영토 주권 문제에 대해 엄정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과 함께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소개했음. 이에 앞서 일본 언론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 14일 구글의 일본 현지법인에 전화를 걸어 센카쿠 열도라는 일본명과 다오위다오라는 중국명을 병기하고 있는 지도사이트에서 중국명을 삭제할 것을 구글에 건의했다고 보도했음.
- 일본 당국의 이런 요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에게 구글 지도사이트에서 다오위다오라는 중국 명칭을 삭제토록 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임. 일본 언론은 당시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만큼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구글에 전달했으며, 구글 측은 ‘알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구글은 지난 8월 베트남과 중국 간 국경선 일부가 잘못 구획돼 베트남 북부 일부 지역이 중국 영토로 표기됐다는 베트남 정부의 항의에 대해서는 오류를 시인하고 수정을 약속했음.
-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인 구글은 중국 정부의 검열에 반발, 지난 3월 중국어 검색 사이트(google.cn)의 서비스를 중단한 채 중국 내 사용자들이 검열을 받지 않는 홍콩 사이트(Google.com.hk)에 우회접속 하도록 하며 중국과 갈등을 빚었으나 4개월 만인 지난 7월 중국법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허가 갱신을 신청, 허가를 받았음.

● 日총리 “中 반일 시위 유감”(10/18)

-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중국의 반일(反日) 시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음. 간 총리는 18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일 시위와 관련 “중국 측에 유감의 뜻을 전했으며, 일본 국민과 일본계 기업의 안전확보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음. 간 총리는 “일중 관계는 매우 중요한 2국 관계”라면서 “일부 문제가 있지만 전략적 호혜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도 양쪽이 냉정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도 16일 기자들에게 센카쿠(尖閣 :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문제로 중국에서 대규모 반



일 시위가 벌어진 것과 관련 “(영토문제는) 국민감정을 민감하게 자극하기 쉬운 테마”라면서 양국 정부가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16일과 17일 중국 일부 도시에서 계속된 시위에서 일본계 음식점과 전제제품 판매점 등이 공격을 받아 유리창이 깨지고 일본자동차가 부서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